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Ⅱ

이하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 동향이다.



젠더와 입법
Brief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구체화 및 난임휴가 신설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교육을 사업주가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화하고, 성희롱 방생시 사업주의 조치 또한 강화하였다. 한편, 동법 개정을 통해 난임휴가를 도입하여 모성보호 또한 강화하였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109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5.29.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4.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u>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u> 3. 4. (현행과 같음)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 <u>년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생 략) <u>〈신 설〉</u> ②·③ (생 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u>〈신 설〉</u> ⑤ (생 략)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에 없는 경우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자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p> <p>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p> <p>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p> <p>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벌칙)</p> <p>① (생 략)</p> <p>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 략)</p> <p>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p> <p>3. ~ 6.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제37조(벌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p> <p>3.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과태료)</p> <p>① (생 략)</p> <p>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39조(과태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김삼화위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이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실제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23인)」이 2017년 11월 24일 수정가결되어, 성폭력피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었다.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의 경우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신 설〉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게 되었다.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04호) [2017.3.21. 일부개정, 2017.6.22.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u>〈신 설〉</u></p>	<p><u>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u></p> <p>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이하 이 조에서 “신고된 현장등”이라 한다)에 출동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등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제38조(과태료)</u></p> <p><u>〈신 설〉</u></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p><u>제38조(과태료)</u></p> <p>①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5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3.1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u>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u></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p> <p>1. ~ 4. (생 략)</p> <p>② (생 략)</p>	<p><u>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u></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적용 장소 확대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화장실’의 적용범위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제한되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욕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156호)
[2017.12.12. 일부개정, 2017.12.12.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욕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22인)」이 2017년 11월 24일 수정가결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많다. 따라서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8년 6월 13일 시행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02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6.1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제1조의2(기본이념) <u>①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u> <u>②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u>③ 국가는 가정폭력 예방활동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u>직접적으로</u>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가정폭력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u>피해</u> 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u>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u> 한다. ③·④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u>8.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u>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해야</u>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조의8(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 등) <u>① 국가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피해자가 부부상담 또는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가해자(친권자를 포함한다)의 면접교섭권을 직접 법원에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상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u>②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u>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u>〈신 설〉</u> <u>②·③ (생 략)</u>	제5조(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상담소 및 장애인상담소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u>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u> 5. 6. (생 략)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현행과 같음) 3.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u>〈삭 제〉</u> 5. 6.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② (생 략) <u>〈신 설〉</u>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u>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u>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3. (생 략) <u>② (생 략)</u>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u>가정폭력가해자가 아닌</u>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u>② (현행과 같음)</u>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② (생 략)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자립지원금</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조의6(피해자 생활보호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에게는 입소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u>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u> 5. ~ 8. (생 략) ② (생 략)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u>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피해자나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u>

<u>〈신 설〉</u>	2.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가사소송법」에 의한 법원 출석을 포함한다)
<u>〈신 설〉</u>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동행한 관할 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은 피해자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② (생 략)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정폭력가해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한 직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 등과 의료 및 법률 등 피해자가 보호·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제공하고, 피해자 요청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업무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16조(비밀 업무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가정폭력가해자(친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영유아보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및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3.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등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 「경찰공무원법」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피해자에 대한 가출 및 실종수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 및 사법경찰관리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신 설〉	5.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신 설〉	6. 「변호사법」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거나 했던 법률 관계자
제18조(치료보호) ① (생 략)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치료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 비용의 지원범위·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20조(벌칙) 〈신 설〉 (생 략)	제20조(벌칙) ①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제22조(과태료)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2인)」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추가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었다. 우선,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 추가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치료명령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비가 있었다. 그 외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및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70호) [2017.10.31. 일부개정, 2017.10.3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p> <p>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p> <p>나. ~ 라. (생 략)</p> <p>3. (생 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p> <p>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54호) [2017.12.19. 일부개정, 2018.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p> <p>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p> <p>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p> <p>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p> <p>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p>

<p>다.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 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p> <p>라. (생 략)</p> <p>3. (생 략)</p>	<p>다.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 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p> <p>라.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p> <p>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p> <p>③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의 심사예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원은 제1항 본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⑤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며,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p>

	<p>⑥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⑦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抗告)를 할 수 있다.</p> <p>⑧ 제7항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p>
〈신 설〉	<p>제8조의3(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p> <p>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중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고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종료·가중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을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p>
〈신 설〉	<p>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보호관찰소의 장 및 수용시설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p>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p>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p> <p>①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2. (생 략)</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p>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p>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 ⑭ (생 략)</p>	<p>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 ⑭ (현행과 같음)</p>
제25조(가중료 등과 치료명령)	제25조(가중료 등과 치료명령)
<p>① 「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중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중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③ (생 략)</p>	<p>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중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중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전자장치 부착 제도 보완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우선, 구금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범방지를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61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6.1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 ⑥ (생략) <u>〈신설〉</u>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 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 (생략)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생략) ②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 3. (생략) <u>〈신설〉</u> ③ (생략)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p>열람 또는 조화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⑤·⑥ (생 략)</p> <p>⑦ 그 밖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화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제공·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p> <p>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③ ~ ⑤ (생 략)</p>	<p>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p> <p>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p>②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p> <p>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 <p>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② 법원은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 <p>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p> <p>(생 략)</p> <p>〈신 설〉</p>	<p>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p> <p>① (현행 제독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p>
<p>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p>	<p>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p>
<p>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p> <p>① (생 략)</p> <p>② 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p> <p>1. (생 략)</p> <p>2.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중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부착한다.</p> <p>③ (생 략)</p>	<p>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7항제1호·제8항, 제14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7항제1호·제8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p>	<p>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p>

<p>〈신 설〉</p>	<p>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p> <p>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부처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부처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8조(벌칙)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 설〉</p>	<p>제38조(벌칙)</p> <p>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결혼·임신·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 하향 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정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14701호) [2017.3.21. 일부개정, 2017.9.22.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p> <p>2. (생 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p> <p>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 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p> <p>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1. 경력단절여성등의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p> <p>2.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p> <p>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p> <p>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p> <p>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p> <p>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p> <p>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3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p> <p>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프로그램의 개발·보급</p> <p>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p> <p>3.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p> <p>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p>

	<p>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p> <p>6. 지원센터 평가 및 종사자 교육훈련</p> <p>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3조의3(지정 취소)</p> <p>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p> <p>4. 그 밖에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p> <p>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③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현행법은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 등의 복지 급여 제공과 자립을 위한 자금 대여 및 고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기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으로 인하여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건강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나아가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대상에는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를 포함하였다. 국가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하였다. 나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미혼이 아닌 여성에게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5212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6.1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③ (생략)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355호) [2018.1.16. 일부개정, 2018.7.17.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③ (생 략)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 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2. (생 략)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나. (생 략) 4. 5. (생 략) ② (생 략)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나.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이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과 학교생활 및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각각 9.4%와 18.3%로 조사되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실제 차별·폭력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의 인식 등에 관한 조사는 제외되어 있고,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역시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우선, 다문화 이해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4702호) [2017.3.21. 일부개정, 2017.3.2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실태조사 등) ①·② (생략)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생략)	제4조(실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 ④ (생략)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6.1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 ⑤ (생략) <신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생 략)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 략)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인가구 복지 증진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함으로써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족실태조사에도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덧붙여,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건강가정기본법(법률 제15350호) [2018.1.16. 일부개정, 2018.7.17.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신 설〉 3. 4. (생 략)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현행과 같음)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u>생활단위</u> 를 말한다. 3. 4. (현행과 같음)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③·④ (생 략)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② (생 략)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⑤ (현행과 같음)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 축소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이에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2017.10.31. 일부개정, 2017.10.3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 도입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를 통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인지의 허가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해졌다. 즉, 「민법」 제 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4.30.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하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인지의 허가 청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하게 하였다.

민법(법률 제14965호) [2017.10.31. 일부개정, 2018.2.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第844條(夫의 親生子의 推定) ① 妻가 婚姻 中에 胞胎한 子는 夫의 子로 推定한다. ② 婚姻成立의 날로부터 2百日後 또는 婚姻關係終了의 날로부터 3百日內에 出生한 子는 婚姻 中에 胞胎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 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2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분할연금 산정 기간 정비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다(2015헌바182). 따라서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법률 제15267호) [2017.12.19. 일부개정, 2018.6.20.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국내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실시 및 국내결혼중개업체 정보 공개 강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9월 까지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573건으로 동 기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인 214건보다 월등히 많으며, 피해 유형도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도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 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보다 많고, 피해 유형 또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도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2017.12.12.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1호) [2018.1.16. 일부개정, 2018.7.17.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일본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및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7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6.1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 ② (생 략)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u>신청인에게</u> 알려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u>즉시 신청인에게</u>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장제비 지원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 ② (생 략)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생 략)	제11조의3(국적 회복 등의 지원)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제11조의3(법률상담 등) (생 략)	제11조의4(법률상담 등)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
〈신 설〉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추가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2000년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채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유엔의 결의를 반영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으나, 결의안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점검, 평가 및 개선요구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등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하여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2018년 3월 13일 시행된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206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3.1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③ ~ ⑤ (생략)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등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② (생략) <u>〈신설〉</u>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등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김삼화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이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일부 미비되어 있는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에 있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보다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4703호) [2017.3.21. 일부개정, 2017.9.22.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 ③ (생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 (현행과 같음)

<p>제11조(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정책개선을 권고</u>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p> <p>〈신 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 또는 사업의 <u>개선을 권고</u>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반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반영계획을 통보한 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반영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u>수립·시행</u>에 관한 사항</p> <p>5. 6. (생 략)</p> <p>③ (생 략)</p>	<p>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u>수립·시행·반영</u>에 관한 사항</p> <p>5.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기준 개선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보다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근로기준법(법률 제15108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5.29.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60조(연차 유급휴가)</p> <p>① · ② (생 략)</p> <p>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p> <p>④ · ⑤ (생 략)</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p> <p>1. 2. (생 략)</p> <p>〈신 설〉</p> <p>⑦ (생 략)</p>	<p>제60조(연차 유급휴가)</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p> <p>⑦ (현행과 같음)</p>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활성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1월 24일 원안가결되었다. 우선,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은 임신·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하되 구조적인 사회적·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현재의 정책 흐름과 저출산이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또한 현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설치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하고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이용요금의 합리화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였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2018년 3월 13일에 시행된다.

모자보건법 (법률 제15186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3.1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가족계획사업”이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受胎調節)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 12.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10. ~ 12.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문미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2인)」이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현행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42호) [2017.12.19. 일부개정, 2018.6.20.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실태 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실태 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研修)나 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② (생략)

제11조(적극적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적극적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 대학 등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p>제12조(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p> <p>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12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p> <p>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p> <p>1.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p> <p>2.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p> <p>3. 여성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환경 조성</p> <p>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권한의 위탁)</p> <p>(생 략)</p> <p>〈신 설〉</p>	<p>제16조(권한의 위탁 등)</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강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에 대한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아동복지법(법률 제14887호) [2017.9.19. 일부개정, 2017.12.20.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신설〉	제12조(현행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 17. (생략)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u>학교</u> 19. ~ 21. (생략) 〈신설〉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적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 17. (현행과 같음)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u>교육을 실시하는 기관</u> 19. ~ 21. (현행과 같음)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u> ②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적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아동복지법(법률 제14925호) [2017.10.24. 일부개정, 2018.4.25.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u>점검·확인</u>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u>연 1회 이상 점검·확인</u> 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아동복지법(법률 제14925호) [2017.10.24. 일부개정, 2018.4.25.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법률 제140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 (보호조치)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40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 (보호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 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생략) 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학생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u>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들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 <u>②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치 등 조치) (생 략)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치 등 조치) (현행과 같음)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생 략)	

<p>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p> <p>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p> <p>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 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p> <p>2. ~ 22.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p> <p>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p> <p>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p> <p>2. ~ 2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p> <p>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가족·친족,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p> <p>2. 신체적·정신적 치료</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p> <p>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p> <p>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p> <p>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p> <p>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p> <p>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p> <p>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p> <p>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p> <p>6의2.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운영</p>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p> <p>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5. (생략)</p> <p>6.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p> <p>7. (생략)</p>	<p>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p> <p>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p> <p>6. (현행과 같음)</p> <p>6의2.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운영</p> <p>7. (현행과 같음)</p> <p>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p> <p>7.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p> <p>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④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의 명단,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⑦ 그 밖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p> <p>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생 략) 9.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p>10.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의2. (생 략)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 8. (생 략) 	<p>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p> <p>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현행과 같음) 9. 아동보호전문기관 <p>10.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의2. (현행과 같음) <p>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 8. (현행과 같음)
<p>〈신 설〉</p>	<p>제65조의2(연차보고서)</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p> <p>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제71조(벌칙)	제71조(벌칙)
<p>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략)</p> <p>2. 삭제</p> <p>〈신설〉</p> <p>〈신설〉</p> <p>3. ~ 7. (생략)</p>	<p>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2의2.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p> <p>2의3. 제4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p> <p>3. ~ 7. (현행과 같음)</p>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이 없으므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피해아동 보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판사가 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255호) [2017.12.19. 일부개정, 2018.6.20.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p> <p>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신설〉</p> <p>6. ~ 9.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p> <p>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의 상담·치료위탁</u></p> <p>6.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u>연고자</u>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 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u>등에</u>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⑥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u></p>
<p>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p> <p>① (생 략)</p> <p>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생 략)</p> <p>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영유아보육 지원 강화 및 어린이집 확대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7년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우선, 현행법상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외에도,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공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 규정, 보육에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추가,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 등을 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4597호) [2017.3.14. 일부개정, 2017.9.15.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p>제9조의2(보호자 교육)</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p> <p>5. ~ 7. (생 략)</p>	<p>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p> <p>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p> <p>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p>
<p>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p> <p>(생 략)</p> <p>〈신 설〉</p>	<p>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p>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p>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6. ~ 7. (생 략)</p> <p>② (생 략)</p> <p>〈신 설〉</p>	<p>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p> <p>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p> <p>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p> <p>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유아교육 지원 강화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염동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이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이 변화하고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부도 「통계법」 및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법에는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이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안의 조문 및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비교육적이어서 안 된다. 그러나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즉 기존의 '수용'을 '배치'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유아교육법(법률 제14602호)
[2017.3.21. 일부개정, 2017.6.22.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은 누구든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의 법인이나 단체가 식별되는 자료에 대한 요구 및 제공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한 항목에 한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 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의 자료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직원
 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 ⑨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법률 제15232호) [2017.12.19. 일부개정, 2017.12.19.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② (생 략)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u>유아수용계획</u>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④ (생 략)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u>유아배치계획</u>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른 <u>유아수용계획</u> 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른 <u>유아배치계획</u> 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